

캠코, HUG와 같은 금융공공기관들은 정책당국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산업, 기업 성장, *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다양한 부문에 있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3공고'나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확대 등이 겹쳐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캠코는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5년새 9조 가까운 부채가 증가했고, he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통해 회수 못한 대위변제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여한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잠재적 리스크를 품고 있으며, 금융 지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금융기관의 ~~지원~~ 지원 지속 여부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해 세심히 보겠다.

높은 우산이라도 비는 막아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더~~ 더욱 큰 리스크에 광범위하게 노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은 여러 금융 부문의 취약하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고령기에} 버팀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활발한 경제 활동, 투자, 성장 등에 ~~제~~ 제동이 걸릴 것이고, 이는 결국 단일 기관의 건전성 악화보다 더욱 큰 시스템 리스크를 금융 시장에 가져올 것이다. 캠코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은 국민들의 삶과 원활한 금융 인프라 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기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채무 리스크에 놓여 있는 이유를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원 규모의 '과도함'이 첫 번째이다. 그 예로, 정부의 출발기금 ~~추진~~ ~~이~~ 수요 확대에 맞춰 추가 출연 없이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 * 부채 규모가 증가한 캠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채무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 맞으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및 ~~공~~ 시장 불안정성 등 ~~이러한 지원의~~ ~~내부~~ 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양으로 다가왔다. ~~이처럼~~ 이같은 상황을 피하여 채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과 개별 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좀 더 보수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게 하여 세어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낭비를 막아줄 것이다. 또한, 정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경우도 필수적이다. 최근 ~~반연회 후회~~ ~~연대금~~ ~~세금~~ ~~기독교~~ ~~인~~ ~~금~~, 저부권성 유지로 위한 국가 펀드 개설 등을 통해 유사시 재부 리스크를 초월할 수 있는 비상책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관장잡의 정책